

| 노사정대표자회의_ 기자간담회 |

문성현 위원장, “지금이야 말로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때”

4개 의제별위원회 발족,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의제논의 본격화

이세종 전문위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중단위기에 대한 우려와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아래 기자회견문 참조)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지난 4개월을 함께 해온 노사정 대표자들에게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에 불참 의사를 선언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가 중단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청년 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공포 이후 4.23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4개의 의제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 7월 12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7월 17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7월 20일에 각각 발족시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본위원회 개최가 미뤄지고 있지만, 4개 의제별위원회는 이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띄우기로 합의한 데다, 격차와 불평 등 해소, 노동존중사회 구현 등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제 논의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개 의제별위원회는 발족회의에서 각각 논의해야 할 세부 의제들을 설정하는 한편, 우선 과제와 중장기 과제 분류 및 논의 방법 모색 등 논의 시간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9월 사회적 대화 참여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을 포함한 경제사회 주체가 온전히 함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걸음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언

지난 1월 3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등 6자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여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었습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여 특정 현안이 아닌 포괄적인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은 무려 19년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높인 것도 사실입니다.

4개월 동안의 대화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넘어서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개편안을 합의하였으며 이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으로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4개의 의제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해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①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②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③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그리고 ④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사회적 대화는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

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낮아지고 ‘개혁’을 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청년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 세제(EITC) 개선과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 임금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제고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제 이외에도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도 시급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책임자로서, 저는 지난 4개월을 함께 해온 노사정 대표자분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노·사·정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합니다.

2018. 6. 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